

아동종합실태조사로 보는 안전 수칙 준수



Current Status of Child Safet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이상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2018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사고 사망, 카시트(안전벨트) 사용, 성폭력 피해, 아동학대 등의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보행 사고, 가정 내 생활 안전 수칙 준수, 학교폭력 지표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어 더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내실화 및 예산 확대, 차별과 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 아동 안전 정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아동복지법」 제1조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 안전’이 아동복지의 목표로 입법화된 것은 2000년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서이며, 이후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

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동정책과 관련한 수많은 종합대책과 기본계획이 존재함에 따라 중첩과 누락이 발생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류정희 외, 발간 예정), 그동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계획, 어린이 제품안전 기본계획,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조기 발견·보호 종합대책,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종합대책, 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쌓아 왔다(여성가족부, 2019, pp. 260-343).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년) 또한 이러한 노력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아동의 안전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등의 생활 안전,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과 식생활 위해 요인 차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 안전,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안전 관리를 안전 영역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성과 및 관리 지표를 선정하여 이행 과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이상정 외, 발간 예정).

이 글에서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 지표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아동이 더욱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아동 안전 실태

가. 안전사고

아동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안전사고 사망자, 가정 내 사고, 보행 사고 사상자, 고속도로 유아 카시트 착용률을 성과 지표와 관리 지표로 선정하였다.

우선, 안전사고 사망자는 2018년 기준 2.4명으로 2015년의 3.1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이 손상이나 중독에 의해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1.5%로 2013년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역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응급실 이용 원인으로는 ‘찢리거나 베임’이 58.3%로 가장 많았고, 낙상 23%, 화상 14%, 중독

표 1.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지표 달성도: 안전사고

구분	지표	현재 (2013년)	목표치 (2019년)	성과치*	주관 부처	자료
성과 지표	0~14세 안전사고 사망자 수 (아동 10만 명당)	3.1명 (2015년)	-	2.4명	행정안전부	사망원인통계**
관리 지표	가정 내 사고 발생 건수(15세 미만)	16,564건	15,000건	16,343건	보건복지부	어린이안전사고 사례분석보고서
	보행 사고 사상자 수 (13세 미만)	5,023명	4,300명	7,412명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고속도로 유아 카시트 착용률	33.60%	60%	60.1%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주: *2019년 8월 현재 동일 지표 확인 불가 항목으로 대체 지표 사용, 시계열 변화 확인. 목표치 달성도 확인 불가능.

**2018년 기준(2020년 4월 기준 최신 통계 결과).

자료: 이상정, 김세원, 김영지, 안재진, 최창욱, 황정하, 김지민. 발간 예정. 2018·2019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 아동종합실태조사: 안전 수칙 준수

(단위: %)

구분	조그만 물건 놀이	카시트 사용	위험 물질 방지	외출 시 성인 동반	욕조·화장실 아동 방치	도보 시 아이 손 잡음	안전모 착용	안전벨트 사용
	0~5세		0~8세		3~8세		3~17세	
2013년	18.7	65.2	84.4	93.7	34.9	85.9	60.5*	75.8
2018년	20.3	81.7	85.4	92.2	35.8	91.1	56.2	86.6

주: *만 3~8세 아동의 주 양육자만 응답.

자료: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이봉주.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3.

2.5% 순으로 나타났다(류정희 외, 2019, pp. 406-408). 반면, 주 양육자의 아동 연령은 다르지만, 안전모 착용률이 2013년에 비해 4%포인트 이상 감소한 상태이며 3~17세 아동 스스로도 10중 4명 이상(43.8%)은 안전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표 2), 안전모 사용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정 내 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1만 6564건에서 2018년 1만 6343건으로 5년간 221건의 소폭 감소만 있었다. 이는 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목표치인 2019년 기준 1만 5000건 달성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표 1). 다음으로 보행 사고 사상자 수는 2018년 7412명으로 2013년보다 오히려 24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속도로 유아 카시트 착용률은 2018년 60.1%로 2013년의 33.6%보다 크게 증가하여 1차 기본계획의 목표치(6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카시트 착용과 관련해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2013년 대비 2018년 카시트 사용률은 16.5%

포인트 증가한 81.7%였으며, 아동의 안전벨트 사용률 역시 10.8%포인트 증가한 86.6%로 자동차 이용 시 주 양육자의 아동 안전 수칙 준수 상황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2).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의 안전 수칙과 관련해 약품·뜨거운 물·화기 등의 위험한 물질을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수칙은 2013년과 2018년 모두 차이 없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반면, 땅콩·포도·단추 등과 같이 조그만 물건을 가지고 놀게 하거나 욕조나 화장실에 아동을 혼자 둔다는 응답은 2013년 대비, 각각 1.6%포인트, 0.9%포인트 증가하였다. 가정 내 사고 발생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주 양육자와 아동 모두에게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행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관련, 도보 시 항상 아이의 손을 잡는 주 양육자는 2018년 91.1%로 2013년 대비 5%포인트 이상 증가했지만, 0~8세 아동의 주 양육자 중 외출 시 성인이 동반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8년 92.2%로 2013년 대비 1.5%포인트 감소하였다(표 2). 영

유아의 경우 주 양육자 동행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하므로 보행 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단독 외출과 관련한 주 양육자 및 아동 교육과 자동차 운전자, 안전한 도로 환경 등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정책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나. 학대·폭력

아동 범죄 피해자(만 15세 이하)의 수는 1차 기본계획의 성폭력과 상해폭행 성과 지표에서 서

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18년 기준, 성폭력 건수는 2013년 대비 780건 감소한 반면 상해폭행 건수는 오히려 122건 증가하였다(표 3).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의 학교폭력 경험률 또한 0.3%포인트 증가하여 학교 안팎의 지표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표 3). 한편,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9~17세 아동 대상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2013년에 비해 2%포인트 감소한 반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은 2.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 두 조사의 연령 차이를

표 3.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지표 달성도: 학대·폭력

구분	지표	현재 (2013년)	목표치 (2019년)	성과치**	주관 부처	자료
성과 지표	아동 범죄 피해자 수 (15세 이하)	3,100건(성폭력) 3,473건(상해폭행)	-	2,320건(성폭력) 3,595건(상해폭행)	경찰청	경찰청 범죄 통계*
	재학대 판정률	14.4%	10%	10.3%	복지부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
관리 지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3%	1.0%	1.6%***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체벌 경험률	부모 25.7% 교사 23.7%	-	부모 26% 교사 12.2%	여가부 교육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 *2019년 8월 현재 동일 지표 확인 불가 항목으로 대체 지표 사용, 시계열 변화 확인. 목표치 달성도 확인 불가능.
 2018년도 기준(2020년 4월 기준 최신 통계 결과), *2019년 1차 조사.
 자료: 이상정, 김세원, 김영자, 안재진, 최창욱, 황정하, 김지민. 발간 예정. 2018·2019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 아동종합실태조사: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

(단위: %)

구분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013년	32.3	67.8	21.5	78.5
2018년	30.3	69.7	24.2	75.8

주: 만 9~17세 아동 응답.
 자료: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이봉주.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17-423.

표 5.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방임 및 학대 가해(주 양육자)·피해(아동) 경험률

(단위: %)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		
구분	주 양육자	아동	구분	주 양육자	아동	구분	주 양육자	아동
혼자 됨	18.6	20.5	엉덩이 때림	12.3	15.0	큰소리 비난	38.3	34.2
끼니 챙겨주지 못함	12.9	14.4	신체 때림	9.6	13.3	두고 간다 위협	9.3	6.2
병원 데려가지 못함	3.8	4.7	맨손, 신체 때림	23.4	20.8	때리겠다 위협	18.4	17.5
술·약물, 돌봄 문제	2.5	4.0	내동댕이, 밀침	1.8	3.3	욕, 저주	4.2	5.1
더러운, 해진 옷	2.6	3.5	-			-		

주: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의 각 문항은 원문항을 요약 정리하였음.

자료: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이봉주.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48.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아동 관련 폭력 경험률 지표가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그동안의 지역사회 및 학교폭력 관련 정책만으로는 예방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아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차 기본계획 성과 지표 중 아동학대 사례의 재학대 판정률은 2018년 10.3%로 2013년 대비 4.1%포인트 감소하여 목표치인 10%에 근접하였으나 초과 달성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양육자의 22.4%는 아동방임의 경험이 있고, 27.1%가 신체학대 가해 경험이 있었으며, 42%의 주 양육자는 정서학대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9~17세 아동 중 25%는 방임을, 27.7%는 신체학대, 38.6%는 정서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어 주 양육자와 아동 모두 정서학대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류정희 외, 2019, pp. 441-442).

한편, 방임 및 학대 경험의 보고에서는 주 양

육자와 아동 간 차이가 있었다. 정서학대의 경우 주 양육자의 가해 경험률이 아동이 보고한 피해 경험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방임과 신체학대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주 양육자의 가해 경험보다 아동의 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표 5).

제1차 기본계획의 안전 영역 마지막 관리 지표인 체벌 경험률의 변화를 살펴보면(표 3),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약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지만, 부모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며 오히려 0.3%포인트 증가하였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주 양육자의 96.5%는 자녀를 훈육할 때 체벌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지만(류정희 외, 2019, p. 294),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와 ‘불필요하다’는 인식 간 차이는 2013년과 2018년 모두 약 21%포인트의 차이를 보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과거에 비해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 내 학

표 6. 아동종합실태조사: 체벌 인식(주 양육자)

(단위: %)

구분	2013년	2018년
필요	35.0	39.3
불필요	56.8	60.7
모르겠음	8.2	-

주: 2018년도 조사, 4점 척도.

자료: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이봉주.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05.

대 및 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 양육자나 부모의 인식 또한 과거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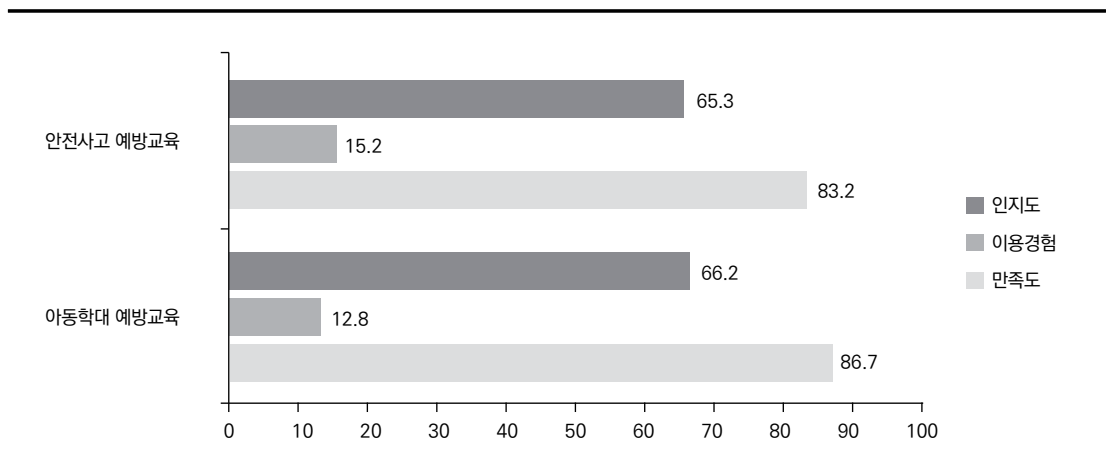
3. 아동 안전 정책 인지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아동 안전 정책에 대한 주 양육자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65.3%, 66.2%로 10명 중 6~7명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교육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이용 경험률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15.2%,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12.8%에 그쳤다. 한편, 두 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 양육자의 만족도는 각각 83.2%, 86.7%로 정책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 아동종합실태조사: 정책 인지도(주 양육자)

(단위: %)



주: 이용 경험은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자료: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이봉주.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84.

개선 및 보안이 필요한 아동정책에 대해 ‘왕따 등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1, 2순위로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2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 성폭력 예방 및 보호 정책’이 25.1%로 학대·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대한 정책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수당정책 도입의 뒤를 이어 ‘아동 안전사고 예방 정책’이 23%로 정책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정희 외, 2019, p. 495). 아동 안전 실태에서도 드러나듯이 아동의 생활 안전 그리고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하여 세밀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고 이러한 점은 아동의 주 양육자 역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주 양육자(부모)가 필요로 하는 안전수칙과 교육의 욕구는 달라진다.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수칙 실천 행동 또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김신정, 이정민, 민지영, 2017). 따라서 아동의 발달기적 특성에 따른 주 양육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예방 교육과 안전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주 양육자의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다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아동 안전사고 발생률을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이다(김신정 외, 2017).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안전 실태와 주 양육자의 정책 욕구를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안전모 사용, 보행 사고 예방, 가정 내 안전수칙 준수와 같은 생활 안전과 가정, 지역사회 및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적극적 정책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행된 지난 5년간의 안전 영역 사업과 예산을 살펴보면(표 7), 과제(사업) 수는 5년 동안 기본계획 전체 과제의 20% 내외를 차지한 반면, 예산은 5% 미만으로 5개¹⁾ 영역 가운데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이행 관리 및 인프라 확충 추진’ 사업에 2015년도 예산의 80배 이상을 배정한 2016년도에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4.7%를 나타냈고(이상정 외, 발간 예정), 이후 점차 감소하여 1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9년에는 2.5%에 불과했다. 안전 영역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사회 안전 분야의 예산으로 생활공간 안전 확보와 아동 안전 기반 구축 예산 비율은 낮았는데, 특히 생활공간 안전 확보 관련 예산은 안전한 삶 영역의 5.2%에 불과하였다(이상정 외, 발간 예정). 생활 안전 분야와 관련한 약 50%의 사업이 비예산 사업으로(이상정 외, 발간 예정), 아동이 안전한 사회 환경

1)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

표 7.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안전한 삶 영역 과제 수와 예산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예산
생활공간 안전 확보	10	3,410	10	3,146	10	3,262	10	10,060	9	5,255
사회 안전 위협 요인 대응 체계 구축	13	71,885	15	122,392	15	133,231	15	142,522	12	152,187
아동 안전 기반 구축	7	49,062	8	56,655	8	49,858	8	41,113	8	53,180
비율(%)*	19	3.9	20	4.7	21	4.4	22	3.4	20	2.5

주: *기본계획 전체 과제 수 대비 안전 영역 과제 수 비율, 기본계획 전체 사업 예산 대비 안전 영역 예산 비율.
 자료: 이상정, 김세원, 김영지, 안재진, 최창욱, 황정하, 김지민. 발간 예정. 2018·2019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을 조성하고 생활공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적극적 개발과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였다. 아동의 사고나 중독과 같은 안전사고로 인한 병의원 또는 응급실 이용 경험률 또한 최근 감소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2018년 한 해 동안 1404건이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아동 안전사고는 경미할지라도 사고의 후유증이 치명적일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주 양육자의 근로 손실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김신정 외, 2017) 가정, 학교 등 지역사회 내 아동의 생활 안전사고 예방 정책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주 양육자 10명 중 6~7명만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1명 정도만이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음을 고려할 때(류정희 외, 2019), 보호자와 아동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 및 수련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당사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과 훈련을 활성화 하는 것 또한 필수적일 것이다.

아동학대의 재학대 판정률이 감소하고 아동학대 발생률 또한 2016년을 기점으로 둔화되었지만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여서(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아동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000년의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국가 정책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고,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다(보건복지 70년사 편찬위원회, 2015). 아동학대 발생 건수에 비해 아직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아동 학대·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아동학대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18년의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체벌에 대한 주 양육자의 인식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체벌이 곧 아동학대 행위로 직결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 서 신체적 처벌은 아동학대의 위험 요인임을 밝혀 왔다(Gershoff, 2002; Gil, 1979; Kadushin & Martin, 1981; Samuda, 1988; Trocmé & Durrant, 2003). 체벌, 학대·폭력의 관련성과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실효성이 즉각 나타나지 않더라도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인식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정책을 수행해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폭력 예방 및 안전에 대한 주 양육자의 정책 욕구도가 높은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 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아동 안전 정책과 관련한 많은 종합대책과 기본계획이 있고(류정희 외, 발간 예정), 아동 안전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 또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10개에 이른다(이상정 외, 발간 예정). 이는 사업 및 역할의 중첩과 누락이 발생하여(류정희 외, 발간 예정)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아동이 안전한 사회 조성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김신정, 이정민, 민지영. (2017).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행동.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1),

91-100.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 이봉주.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임성은, 김성식, 김지경, 신나리, 정선영, ... 허은영. 발간 예정.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이상정, 김세원, 김영지, 안재진, 최창욱, 황정하, 김지민. 발간 예정. 2018·2019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소아청소년 연간손상경험률 추이.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 70년사 편찬위원회. (2015). 보건복지 70년사. 세종: 보건복지부.

Gershoff, E. T. (2002).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 and associated child behaviors and experiences: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4), 539-579.

Gil, D. G. (1979). Unraveling child abuse. *Child abuse and violence*(Ed.), AMS Press, New York. 3-17

Kadushin, A., & Martin, J. A. (1981). *Child Abuse: An interactional event*.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Samuda, G. M. (1988). Child discipline and abuse in Hong Kong. *Child Abuse & Neglect*, 12, 283-287.

Trocmé, N. & Durrant, J. (2003). Physical punishment and the response of the Canadian child welfare system: Implications for legislative reform. *Journal of Social Welfare and Family Law*, 25, 39-56.